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국가기간 시설인 전력망 신속 구축 지원체계 마련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33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개관	4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6
가. 국가 전력망 구축 현황	6
나. 종합적 검토	11
3. 개별 검토	13
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범위	13
나. 전력망위원회 및 하부조직 구성	17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25
라. 규제개선의 지원	31
마. 선하지 등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특례	39

바. 미공개 정보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43
------------------------------	----

※ 참고자료	48
--------------	----

1. 지자체 협조 미흡으로 인한 전력망 구축 지연 사례(단계별)	48
---	----

2. 해외 송전망 건설 촉진 사례	49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한규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5.
3. 회부연월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도모함.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밀양 송전선로 및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전

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으로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심의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의를 두고, 전력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전에 실시계획을 공

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두고,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사. 그 밖에 정보 공개, 권리·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아.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등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및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7장 30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률의 목적, 정의규정,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제2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구성, 업무 등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의제 제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제4장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지선정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및 규제개선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5장은 개발사업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6장은 보칙으로서 보완관리, 정보공개, 권리·의무의 승계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7장

에서는 별칙 규정을 두고 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2대 국회 기준, 같은 제명으로 김성원, 이인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건¹⁾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국가 전력망 구축 현황에 따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뒤 각 제정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건의 법안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①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력망 설비의 범위,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이아 “전력망위원회라 한다) 및 하부조직의 구성, ③ 개발행위의 특례 적용 여부, ④ 규제개선 지원 적용 여부, ⑤ 선하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특례 적용 여부 등이 있음.

1) 의안번호 2200155(김성원의원 대표발의) 및 의안번호 2200762(이인선의원 대표발의)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가. 국가 전력망 구축 현황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발전설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 지연과 전력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동해안 지역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강릉안인 1·2호기, 삼척 블루파워 1·2호기)와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나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이 지연되면서 발전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²⁾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성³⁾ 중이고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면 수도권에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대규모의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송·변전설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투자계획에 따르면 총투자비는 56조 7,000억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초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송·변전설비는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과 전력수급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 갈등⁴⁾이 발생할 수 있고,

전자과 발생·경관 훼손 등의 우려로 지역사회의 수용성도 매우 낮아 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의 반발⁵⁾이 심하여 송·변전설비 구축 사업

3) 2027년부터 반도체 Fab 9개와 협력사 200여개가 입주하는 산단이 조성되며 2050년까지 약 10GW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임.

4) 수혜지와 경과지뿐만 아니라 경과지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절차 초반부터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 전반적인 전력망 확충도 상당히 지연⁶⁾되고 있음.

[표] 주요 전력망 사업 추진 현황(10차 기준)

구분	전체	정상진행	지연	준공지연사유			
				민원	인허가	시공여건	고객사유
건수	31건	19건	12건	5건	4건	2건	1건

구분	설비명	준공목표	지연사유	현재공정
송전선로 (11)	북당진-고덕 2단계	'23.06	시공여건(변환소 준공지연)	가압대기
	동해안-신가평	'25.06	-	시공
	동해안-수도권#2	'26.06	-	입지선정
	동두천C/C-양주	'24.12	인허가(국방부, 행안부 협의지연)	시공
	갈산-신광명	'23.07	-	준공
	북당진-신탕정	'24.12	-	시공
	고덕#2-서안성	'23.02	-	준공
	당진T/P-신송산	'25.12	민원(당진시 비협조)	사업신청
	신장성-신정읍	'29.12	-	입지선정
	신정읍-신계룡	'29.12	-	입지선정
	동제주-완도	'23.12	-	시공
변전·변환소 (20)	신강원	'26.10	-	입지선정
	북당진C/S, 고덕C/S(2단계)	'23.06	시공여건(휴전지연)	시험준비중
	동해안#1C/S, 신가평C/S	'25.06	-	설계
	동해안#2C/S, 수도권#2C/S	'26.06	-	계약준비
	신부평BTB 1단계	'23.06	민원(부평구 비협조)	설계, 인허가
	신부평BTB 2단계	'30.04	-	착수준비
	신송산	'23.12	고객사유(고객 휴전 비협조)	휴전대기
	신시화	'23.06	-	시공
	신장성	'26.06	민원(장성군 비협조)	설계

5) 지자체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송·변전설비 구축이 지연된 사례는 [참고자료 1] 참조

6)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주요 사업 28건 중 약 40%인 11건 지연

구 분	설비명	준공목표	지연사유	현재공정
	신강서	'27.12	-	착수준비
	고덕#2	'22.10		준 공
	신송도	'26.09	민원(시흥시 비협조)	용지매수
	신정읍	'26.12	-	용지매수
	신청주	'24.10	인허가(부지인수 지연)	시 공 중
	신성연	'25.10	인허가(용도변경 지연)	실시설계
	신달성	'25.06	인허가(환경부 협의지연)	사업신청
	신광적	'28.10	-	부지선정
	신목감	'27.12	-	부지확정
	신기흥	'26.12	-	설 계
	신장수	'26.10	-	용지매수

자료 : 한국전력공사

예를 들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500kV)는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을 시작하였는데 현재 당초 계획 대비 6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전력망 건설을 직접 주도하지 않고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송·변전설비 전반을 책임지는 현행 체계하에서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 지역의 전력 과잉생산이나 수도권 전력수급 부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려면 정부가 주요 전력망 구축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과 같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국가 주도로 중요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망 관련 의사결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의무화하고 도로·철도 등 국토계획과 공동건설을 추진하는 등 주민수용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⁷⁾하였음.

예컨대, EU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건설을 환경규제 등 타 공익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로 판단하여 주요 전력망 건설에 대해서는 환경규제를 대폭 간소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고,

미국은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제정하여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을 선정하고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강제승인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도 중임.

7) 구체적인 해외 송전망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사례는 [참고자료 2] 참조

[표] 해외 주요국 국가 전력망 관련 제도개선 사례

구 분		내 용
특 례 법	 (독일)	○ EnLAG('09) :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 명시, 인허가 최소화 및 분쟁절차 간소화
	 (미국)	○ NABEG('11) : 주(州)간 건설법을 연방법으로 통일, 보상체계 강화 ○ 인프라법('21) : DOE의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 선정, FERC 강제승인 기준 개선
참 여	 (독일)	○ 송전망 계획단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의무화
	 (미국)	○ 송전망 계획·승인 전 과정 이해관계자 참여, 진행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보 상	 (독일)	○ 8주 이내에 토지보상 합의한 경우 간소화 보상금 추가 지급(75% 수준)
	 (네덜란드)	○ 6주 이내에 토지보상 합의한 경우 간소화 보상금 지급(20% 수준)
지 중 화	 (독일)	○ 국가 필수 송전망 사업 대상 주거지와 근접성 등 특정 요건 만족시 지중화
	 (덴마크)	○ 기존 송전망의 점진적 지중화 및 신규 송전망의 지중화 의무화 가이드라인 제정
공 동 전 설	 (미국)	○ NextGen 사업 : 미네소타주 고속도로, 통신망·HVDC 공동 연계 ○ SOO Green HVDC 사업 : 아이오와~일리노이주 철도, HVDC 연계
	 (프랑스)	○ Piedmont-Savoy HVDC 사업 : 프랑스-이탈리아 고속도로, HVDC 연계

자료 : 한국전력공사

나. 종합적 검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범부처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②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및 영향평가 특례를 적용하며, ③ 국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보상·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임.

현재 전력망 구축 사업은 대부분 「전원개발촉진법」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정안은 전원설비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같은 무탄소 전원에 연계하거나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용량·장거리 전력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보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영향평가 간소화, 토지등 사용에 관한 특례, 선하지 보상 특례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주요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입법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전원개발촉진법」은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②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인·허가 의제를 적용하며, ③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3. 개별 검토

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범위

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위를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변전설비 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345kV) 이상인 송·변전설비로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제2호).

한편, 김성원의원안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34만 5천볼트(345kV) 이상인 송·변전설비로 규정하였고, 이인선의원안은 동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정의(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변전설비 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변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변전설비 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변전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	비 중 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	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를 공급하기 위한 송 · 변전설비 3. · 4. (생략)	를 공급하기 위한 송 · 변전설비 3. · 4. (생략)	를 공급하기 위한 송 · 변전설비 3. · 4. (생략)

「전기사업법」 제25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항 각호에서 기본방향, 장기전망과 같은 필수적인 포함 사항을 나열⁹⁾하고 있음.

특별법은 사용 전압이 34만 5천볼트 이상인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 중에서도 국가에너지 수급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설비의 확충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9)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 ⑨ (생략)

포함된 중요한 송·변전설비에 한정하여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핵심 송·변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정의하면 법적용대상이 보다 구체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전력망위원회 및 하부조직 구성

제정안은 ①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여 1인 위원장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본문), ② 당연직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안 제7조제1항제1호), ③ 전력망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사전 검토 등 업무 지원을 위해 하부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5항).

한편, 김성원의원안은 ①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1인으로 하여 2인 위원장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② 당연직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열거하며, ③ 전력망위원회의 사업심의, 분쟁 조정 등 업무 지원을 위해 하부조직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이인선의원안은 동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표] 전력망위원회 및 하부조직 구성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u>위원장 1명</u> 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원장은 국무총</u>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u>위원장 2명</u> 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u>위원장은 국무총</u>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u>위원장 1명</u> 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원장은 국무총</u>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u>리</u>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u>리</u>와 <u>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u> ②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u>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u>의 장,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u>	<u>리</u>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②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u>위원장이</u>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u>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각자 대표한다.</u> ⑤ <u>위원장 모두가</u>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②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u>위원장이</u>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u>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전력망위원회는 <u>사업심의, 분쟁조정, 기술자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u>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1) 위원장 구성과 관련하여 전력망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단일 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경우 법령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출신 위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공동 위원장 체제를 구성하기도 함.

[표] 공동 위원장 체제 위원회 구성 입법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⑥ (생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생략)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역사·문화·도시계획·토지이용·건축·환경·교통·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

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안과 이인선의원안은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1인으로 하여 관련 인허가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부처 및 지자체 간 업무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김성원의원안은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행정각부의 협업 및 업무조정 역할을 맡도록 하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촉위원 출신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복수의 위원장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에 국무총리 외에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둘지 여부는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는 취지와 위원회의 주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를 단독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차관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두도록 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위원회 의사결정의 일관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기보다는 에너지 위원회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은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2) 위촉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정안과 김성원·이인선 의원안은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전력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데, 국회에서도 전력망위원회 위원 구성에 참여할 경우 전력망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강화하여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촉위원의 수를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정수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제정안과 김성원·이인선의원안은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나 관할 지자체 사이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러한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제12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자료 요구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자료 요구 및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	제12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자료 요구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및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지선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지선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	및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지선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③ 사업시행자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먼저, (1)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송·변전설비는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에 따라 구축이 필요한 각각의 송·변전설비에 대해서 한전이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지역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¹⁰⁾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

10) 2024년 1월 19일부터 개정된 「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19552호)이 시행되면서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이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전력망과 유사한 국가 핵심 사회기반시설인 철도나 도로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입지선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주도¹¹⁾하고 있으나, 송·변전설비의 입지선정은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전이 주도하고 있어 이해관계 조정, 지자체 협조 등에 대한 실행력이 약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 조정이나 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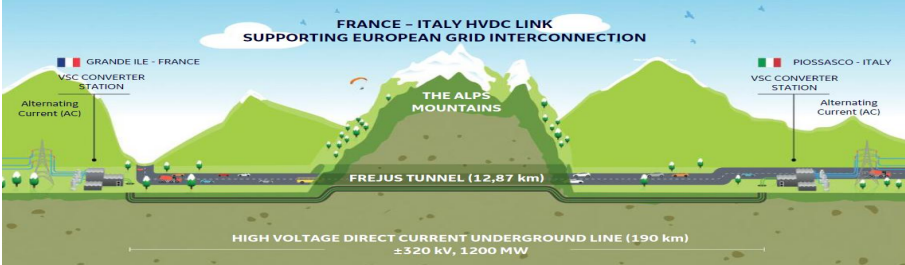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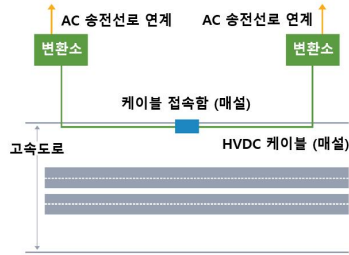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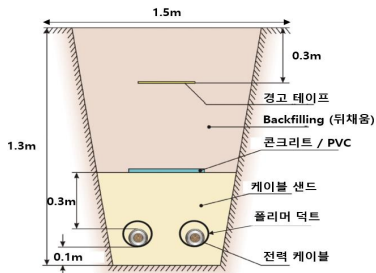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구축할 때 「전원개발촉진법」의 입지선정 절차를 따르도록 하면서 주민 반대나 지자체 갈등으로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면 이를 정부 차원에서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2)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과의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전력망을 도로와 같은 선형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토지의 취득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을 축소하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해외

11) 도로의 경우는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철도의 경우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직접 수립함.

에서는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를 건설할 때 도로 부지를 활용하여 지중에 송전망을 설치한 사례가 있음.

[표] 해외 주요국 송전망 공동개발 사례

국 가 명	주요내용
프랑스- 이탈리아	○사업명 : Piedmont-Savoy HVDC Interconnection(건설기간 '16~'20) ○목 적 : 프랑스-이탈리아간 전력연계로 시장효율 향상 ○내 용 : 송전망 건설민원, 환경영향 등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66km 고속도로, 18km 일반도로 등)하여 지중경과지 구성 
미 국	○자 료 : NextGen Highways Feasibility Study for the Minnesota Department Transportation('22.4) ○목 적 : 고속도로 부지를 활용한 송전망, 통신망의 효과적 건설 ○내 용 : 고속도로 갓길에 지중관로를 매설하여 지중HVDC, 광케이블 설치 고속도로 내 지중 HVDC 설치 위치  지중 HVDC 설계 구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설비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두 제정안과 같이 전력망과 다른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할 방법을 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과 이인선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기관에게 공동개발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개발이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행위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부처가 참여하는 전력망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보임.

라. 규제개선 지원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망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요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표] 규제개선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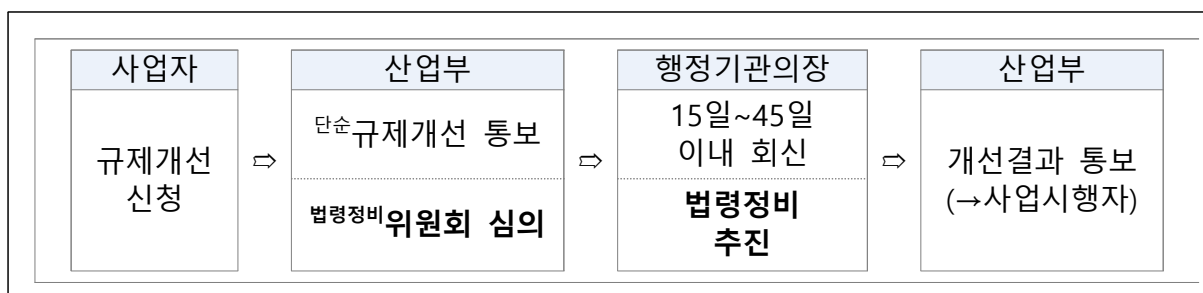
제정안
제15조(규제개선의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력망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제정안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① 규제개선에 법률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함.

반면에, ② 규제개선이 법률정비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력망위원회가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

[표] 규제개선 지원 내용



자료: 한국전력공사

최근 환경오염이나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적·행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국가 전력수급에 중요한 송·변전설비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전력망 확충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이러한 규제개선을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 없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단독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우므로, 제정안과 같이 범부처 위원회인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법령 정비를 포함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유사 입법례에서는 규제개선 지원을 규정하면서 규제개선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개선 관리·감독과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규제개선의 지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규제개선이 부작용 없이 취지대로 적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임.

[표] 규제개선 지원 입법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49조의 협력모델 및 제23조의4의 공급망 안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모델 및 공급망안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쟁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제51조의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51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제15조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 중 법령 정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 2.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규제개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④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절차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선하지 등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특례

제정안과 이인선의원안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송전선로가 지상 또는 지하에 지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게 송전선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17조).

[표] 선하지 등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특례

제정안	이인선의원안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보상 특례)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인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인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제정안	이인선의원안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방법,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방법,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1항¹²⁾에 따르면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가 설치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송전사업자는 현재 한전뿐이므로 송전선로 선하지(線下地) 등에 대한 보상은 한전이 실시해야 함.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 지상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와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보상금 산정을 위한 면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5]에서도 토지의 이용 저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사용¹³⁾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사업법」에서 명시한 정당한 보상은 송전선로 구축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 가치 하락에 대

12) 「전기사업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5

한 금전 보상으로 보이며 토지 매수청구를 규정하는 조문은 없음.

그리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송전선로 인근의 주택에 대한 매수청구를 규정¹⁴⁾하고 있으나 선하지 등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선하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

구분	사용기간	보상금액 산정기준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한시적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평가가액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지하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1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垓)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전선로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해당 토지 자체를 송전사업자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그런데, 지상이나 지하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경우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경관 훼손, 투자 가치 하락, 전자파로 인한 영향 우려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전력망의 핵심이 되는 송·변전설비는 국가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구축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사적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면 국가가 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청구권은 현행법의 손실보상 이상을 지급하는 시혜적인 제도로써 한전 재무적 부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매수 청구 시 매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재산권에 대한 제약 수준, 경관 침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바. 미공개 정보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제정안과 김성원·이인선의원안은 모두 보안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미공개정보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제29조(벌칙)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제29조(벌칙)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및 제2항에 해당하	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및 제2항에 해당하

제정안	김성원의원안	이인선의원안
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는 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벌과 더불어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전력망 설비 구축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김성원의원안은 미공개정보 활용, 제공 및 누출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¹⁵⁾에서 벌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문 규정에 따라 벌금액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유사 입법례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상한액 등 보충적인 내용을 단서 조항에 규정하는

15) 김성원의원안은 구체적으로 ①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는 경우, ② 이익 또는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③ 이익 또는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있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미공개정보 활용 등에 대한 처벌 입법례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시개발법」

제79조의2(벌칙) ①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

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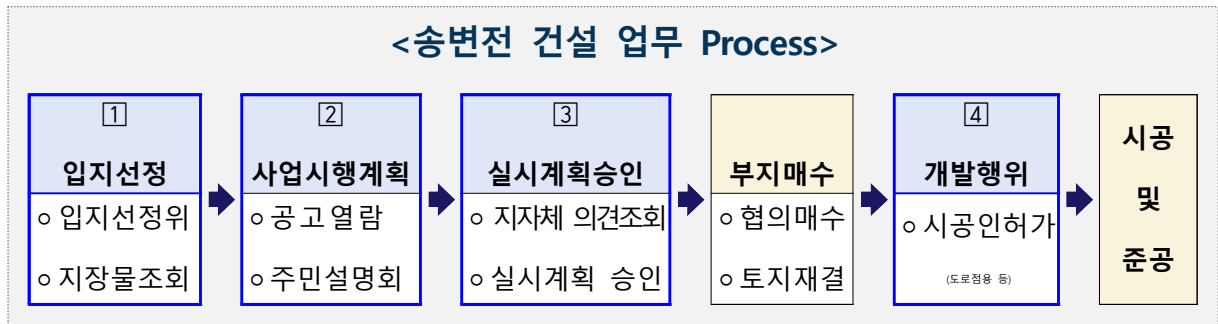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자료 1] 지자체 협조 미흡으로 인한 전력망 구축 지연 사례(단계별)



구 분	사업명(준공목표)	지자체	주요내용		現공정
① 입지 선정	북당진-신탕정T/L (‘24.12)	당진시	◦ 시·주민 연대로 사업 원천반대(‘04~‘14)	해소	시 공
	신정읍분기 등 3개 T/L(‘26.12)	정읍시	◦ 입지선정위 미참여(‘18)	해소	설 계
	신장성S/S (‘26.06)	장성군	◦ 확정입지 GB개발계획 변경 미승인(‘21)	해소	부 지 매 수
	신강원-강릉안인T/L (‘26.10)	정선군	◦ 정선군 입지선정 참여 거부(‘21) * 개정 전축법 안내 후, 정선군 참여 회신 (‘24.1)	해소	입 지 선 정
	신장성-신정읍T/L (‘29.12)	고창군 장성군	◦ 입지선정위 참여 거부(‘23.9~‘12) 전축법 개정 근거로 입지선정 참여요청 (‘24.1)	지속	입 지 선 정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29.12)	고창군	◦ 입지선정 절차 방해 고창 → 부안으로 양육점 변경 中 (~‘24.3)	지속	입 지 선 정
② 사업 시행 계획	당진화력-신송산T/L (‘25.12)	당진시	◦ 환·평 초안 공고·공람 미시행(‘19)	해소	사 업 신 청
	북당진-신탕정T/L (‘24.12)	당진시	◦ 환·평 초안 공고·공람 거부(‘13) ◦ 주민설명회 거부(‘13)	해소	시 공
	고덕-서안성T/L (‘23.02)	안성시	◦ 환·평 초안 공고·공람 거부(‘18)	해소	준 공
③ 실시 계획	북당진-신탕정T/L (‘24.12)	당진시	◦ 실시계획 변경 등 공고·공람 거부(‘16)	해소	시 공
④ 개발 행위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26.09)	시흥시	◦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인허가 지연(‘22) 분리발주(송도 등) 추진, 필요시 법적 대응	지속	설 계
	신당진-북당진 전력구 (‘25.12)	당진시	◦ 터널 공사중 주변 지반침하 발생(‘22) 당진시 지속협의, 필요시 법적대응	지속	시 공
	북당진-신탕정T/L (‘24.12)	당진시	◦ 개발행위, 국공유지 대부계약 거부(‘20~) ◦ 작업장 공사중지 명령(‘22)	해소	시 공

[참고자료 2] 해외 송전망 건설 촉진 사례

1. 주민 수용성 강화

가. 주민참여 확대

☐ (독일) 송전망 계획 단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의무화

* EU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ACER)은 송전망 계획단계의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참여를 회원국에 권고

- ('06년) 건설 인허가 단계에만 이해관계자 참여가 가능하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민 공청회 등을 생략하여 민원 지속증가 ⇒ 투명한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 인식

- ('11년) NABEG* 법안을 제정하여 송전망 계획 단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의무화 **붙임4** * Grid Expansion Acceleration Act for Transmission

Network

- 송전망 계획의 첫 단계인 ① 시나리오 프레임워크(전원 종류·용량 등 결정)부터 초안을 인터넷(www.netzausbau.de)에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

*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초안 공개를 통해 기후정책 목표, 시나리오 설계 원칙 및 주요 수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후속 단계인 네트워크 개발계획에서의 주민참여를 활성화

- 다음 단계인 ② 네트워크 개발계획에서는 송전망 간이경로, 환경영향, 조치 계획 등을 담은 초안을 인터넷에 2차례에 걸쳐 공개, 주민의견 수렴

※ 지역주민에게 송전망 건설 관련 기본정보와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독립적 이니셔티브인 'Citizen's Dialogue Electricity Network' 운영(정부 지원)

* '20년 기준 약 1,800시간의 기술 토론회 및 상담, 40건의 지역 회의, 25건의 시민 행사 등을 수행

☐ (미국) 송전망 계획·승인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진행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 FERC Order 880에서 송전망 계획단계의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의무화

- 송전선로 계획·승인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법제화하는 등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지속적 참여로 송전망 건설지연 완화
- 이해관계자 의견수용을 통해 송전망 건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토 후 경로 변경

-  (영국) National Grid는 송전망 건설 시 발생하는 영향(소음, 전자파 등)과 건설 사업별 정보(건설 이유, 경과지 등)를 투명하게 공개*

* ‘Development near Overhead line’ 보고서 발간, Greenlink SEGL2 프로젝트(정보공유 웹사이트) 추진

■ (참고) 주민참여 시점에 따른 영향 : 계획 단계 vs 입지선정 단계 ■

※ 주민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은 사업 초기 주민들의 낮은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 핵심요소로 평가 (독일 환경연구소)

구분	계획 단계	입지선정 단계
장점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후속 단계 수용이 상대적 용이	주민의 관심도 및 참여도 높음
단점	주민의 관심도 및 참여도 낮음 (의견제시 제한적)	초기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곤란

나. 보상체계 합리화

-  (독일)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
 - 보상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8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한 경우 간소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 그 외 토지면적, 철탑 유무 등 고려 보상금 책정

* 간소화 보상금은 토지보상금의 75% 수준 (0.50€/m² ~ 2.00€/m²)으로 지급

- TSO, 토지소유자 간 보상금 협의 결렬되는 경우 수용청에서 보상금 결정
- '19년 송전망건설촉진법(NABEG 2.0)을 개정하여 토지 보상수준을 합리화

- ☐  (영국) 송전망 건설을 위한 보상 협의가 12주 이내로 완료되는 경우 간소화 보상금* 지급 (13~18주 이내 협의 시 50%만 지급)

* 간소화 보상금은 토지보상금의 50% 수준으로 지급

- ☐  (네덜란드) 보상 협의가 6주 이내 완료 시 보상금의 20%를 추가 지급

다. 지중화 법제화

- ☐  (오스트리아) SSEA(Salzburg State Electricity Act, '09) 법 제정을 통해 잘츠부르크 지역* 내 110kV 이상 송전망 건설 시 지중화하도록 의무화

* 오스트리아 동쪽에 집중된 풍력발전단지의 잉여전력을 도시(서쪽)에 안정적 공급하기 위한 요충지

- ☐  (독일) 110kV 이하 송전망(장거리 제외)과 발전소의 계통연계에 필요한 110kV 이상 송전망의 경우 지중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거지와의 근접성, 지역 및 중보호 등의 특정 요건을 만족 시 지중화하도록 의무화

- ☐  (덴마크) 풍력발전 적기접속을 위해 송전망 건설시 지중화 의무화 추진*

* 덴마크는 국토가 대평야 지역이며, 토양이 대부분 모래 성분이어서 지중화에 최적화된 환경 보유

- ('08년) TSO는 132/150/400kV급 송전망의 지중화를 권고하는 보고서 발간

- ('16년) 132/150kV급 기존 송전망의 점진적 지중화 및 신규 송전망의 지중

화 의무화를 담은 송전망 가이드라인 제정*

* '08년 보고서를 기반으로 송전망 건설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완성

- 400kV 송전망 지중화 시 전압 상승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400kV 송전망은 일부만 지중화하는 것으로 변경

☐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위험 지역 내 기설 및 신설 송·배전망의 지중화를 의무화하는 특별법안 발의('22.3)

- 캘리포니아주 유틸리티에게 산불위험 지역 내 송배전망의 지중화 의무 부여
 -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는 송·배전망 건설 지중화에 대한 의무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유틸리티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 부여
- 지방정부의 송·배전망 지중화 건설 시 인허가 기간을 150일 이내로 제한

2. 인허가 절차 개선

☐ (독일) 국가 차원에서 건설이 시급한 송전망 프로젝트의 법제화 및 후속절차 간소화 등 추진

- 연방법*에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를 명시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지원 * 연방법 : Energy Line Expansion Act, '09
 - 해당 프로젝트의 계획 및 승인 절차에 법적 구속력(이행의무)을 부여하고 주(州)단위 계획 (토지사용 계획 등) 보다 우선하여 적용
 - 분쟁 발생 시 연방행정법원 1심 판결로 최종 결정하여 법적 절차 간소화
 - 정부 주도로 송전망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주기적 점검, 필요한 조치 지원
- 주(州)간 상이한 인허가 조건을 연방법으로 통일하고 송전망 계획·승인

권한을 지자체에서 연방 규제기구로 이전 (절차 간소화)

-  (미국)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강제승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州) 정부에 의한 고의적인 인허가 지연 해소^{붙임5}
- ('05년) EPAct 05(Energy Policy Act 2005) 법을 제정하여 에너지부(DOE)에서 선정한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의 인허가 승인이 1년 이상 지연 시, FERC에 해당 프로젝트를 강제 승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이후, 주 정부와의 소송에서 DOE, FERC가 연이어 패소하여 법안효력 약화(선정절차 미흡 등)
- ('21년) 인프라법 제정을 통해 DOE의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 선정 및 FERC의 강제승인 관련 기준 개선

Ⅱ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 선정 및 강제승인 기준 Ⅱ

구 분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 선정 기준	송전망 프로젝트 강제승인 기준
기 준 (EPAct 05)	• 송전용량 부족으로 송전혼잡 발생 혹은 고객에게 악영향 발생 예상 지역	• 주(州) 정부의 입지선정 승인보류 1년 경과 시, 강제승인 가능
신 설 (인프라법)	• 송전망 건설시 소비자의 전기요금 감축 가능 혹은 재생수용 확대 가능 지역	• 주(州) 정부가 송전사업자의 입지선정을 반려한 경우, 강제승인 가능

-  (네덜란드) DEA(Dutch Electricity Act, '09) 법을 제정하여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인허가 기간을 최대 9~12개월 이내로 제한
-  (영국)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 법제화,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
 - 신규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Planning Act of 2008' 법 제정
 - 국가 필수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NSIP*)를 지정·관리하고, 지정된 사업은 패스트 트랙(DCO)으로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

* NSIP(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Projects) : 전압 132kV, 길이 2km 이상인 가공선 건설사업

※ DCO(Development Consent Order) 행정절차

- (개요)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 사업허가 신청 이후 12개월로 인허가 기간 제한

① TO는 송전망 건설 사업 허가행위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사전에 Public Consultant를 시행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후 정부에게 송전망 건설 사업 관련 서류 제출

②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2차 Public Consultant 시행 후 건설 사업 허가 승인

→ 단, 정부에서 서류를 받은 후 검토에 12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의회에 보고 해야 함

■ (참고) EU 권고안 : 송전망 건설 관련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

- (배경) 유럽 내 송전망 건설의 약 21%에서 준공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주민반대에 의한 민원으로 분석됨

- (내용) 송전망 건설 관련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7개 권고안 도출

① 국가 에너지계획, 송전망 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한 최적 계획안 필요

② 환경평가 기준을 일원화하여 관련 행정절차 기간에 대한 부담 경감

③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조기 참여로 능동적 프로세스로 전환

④ 지역 가치 창출, 가치향상 및 보상방안 마련을 통해 수용성 제고 필요

⑤ 시각화 계획 등 새로운 온라인 도구 개발로 소통을 위한 노력 강화

⑥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적절한 대책 마련

⑦ 범국가적 차원의 관련 부처 또는 규제기관 간 정치적 협력 필요

자료: 한국전력공사